# ‘한동훈 비대위’ 수순 밟는 국힘…“주말까지 결론 낼 것”

### 윤재옥 대행 오늘 상임고문단 의견 수렴…당 내부 여론조사도

### 한 장관 “모든 길 처음에는 길 아니었다”…제안 오면 수용 시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이번 주말까지 지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여권 주류는 한 장관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와 관련 이날 한 장관은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주중에 의견 수렴을 마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는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명한다. 이어 당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후보자 임명안이 의결되면 임명 절차가 끝난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여권 주류는 한 장관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지만, 비주류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앞서 윤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직후 14일 중진연석회의와 15일 의원총회에 이어 전날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까지 참석 범위를 넓히며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전날 연석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인선하는 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안에 대해 여론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어 당 원로들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원로와, 또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좀 더 듣고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래 끌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주 중에 하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윤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비대위원장 인선도 늦어지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봐야 한다. 당의 지도체제 정립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또 “예산이 여의찮으면 예산으로 인해서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사실상 다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원로들과 회의 후 비대위원장이 결정해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 장관이 거론되지만, 정치 경험 부족이 단점으로 꼽힌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의힘이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직을 자신에게 제안해올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 장관은 자신을 중용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고리로 민주당 등에서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선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만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尹, 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

조태용

조태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조태용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줬다”며 “국정원장으로서도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김 실장은 “조태열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주스페인대사 등을 지내 양자 및 다자외교경험이 풍부하다”며 “특히 경제통상분야에 해박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국제 환경 속에서 후보자가 가진 경제통상 전문성과 외교적 감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尹 북 ICBM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 깨닫게 될 것”

### “한미일 北 정보 공유 본격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틀 발사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요소수 대란 등 각종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선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 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히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김포 이어 구리 서울편입 특별법 발의

### “하남·고양·부천·광명도 편입 논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인접 지역 경기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말하고 “다음번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순서대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천시도 포함하는 것이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고 했다.

그는 “향후 부천, 고양, 광명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이날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메가시티 개념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메가시티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을 제출한다.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담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경기남부와 충청남도의 경제 연합체 구상인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 개념도 반영된다.

조 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평택·오산·화성, 충남 아산·천안·당진·서산을 묶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로,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연합의 형태”라며 “메가시티의 개념을 단순한 행정적 통합만이 나리 경제적 연합도 포함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